

| 위원회 활동 |

| 본위원회 |

경사노위 ‘중대재해예방산업안전보건위’ 및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설치 의결

제11차 본위원회(서면) 개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논의 연장안도 통과

이세종 협력홍보팀 팀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1년10월8일(금) 제11차 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가칭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위)’ 발족 등 총 3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산업안전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법의 현장 안착률을 높이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이번에 발의됐다. 정부와 한국경총이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잇따라 제안하고, 한국노총과의 조율과정을 거쳐 발족하게 됐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 ‘산업 현장의 안전성 이행력 확보방안’과 ‘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역할’ 등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회의체 신설도 의결됐다. ‘(가칭)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로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21.10~11월)를 거쳐 위원회의 공식적인 명칭과 위원구성 및 세부 의제를 결정하고, 12월에 발족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0월 10일 종료 예정이었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6개월 연장안도 의결됐다. 위원회는 논의기간 연장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및 구제제도와 쟁의행위 및 노조 활동 관련 형사처벌 등’에 관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중대재해는 무엇보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번 본위원회 개최를 통해 3개 안건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신규 위원회의 설치 등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 및 실태조사 착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월6일(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근면위가 고용부 산하에서 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이관·발족된 배경은 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선을 논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논의에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고, 노사관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관계위 공익위원들은 권고안을 발표(19.4.15)하기에 이르렀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적 틀을 유지하되, 그 한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였고, (21.7.6 시행)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된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에 따라 지난 6개월 가량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위원 선정 등 준비 과정을 충실히 진행해왔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고용부 예규)을 대신하는 새로운 운영규정을 기존 예규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였다. 운영규정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보고되어 확정됐다.

또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및 경영자단체에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공익위원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DB', 여성가족부의 '여성인재DB'를 활용하여 1차 풀을 구성하였고, 내부 논의를 통해 선정된 15명의 공익위원을 노사에 추천하고 순차배제를 통해 최종 5명이 확정되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한편, 발족 이후 근면위는 2차~4차('21.9.7.)회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등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단*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 실태조사단 : 근면위 공익위원 추천 후 노·사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전문가 3인과 근면위 노·사위원 각 1인으로 구성(권혁 부산대 교수, 김광현 고려대 교수, 정홍준 서울과기대 교수, 유정엽 한국노동정책2본부장,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

실태조사단은 지난 8.13(금)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표본설계 및 설문 문항 구성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실태조사단의 구성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서, 근면위는 실태조사단에서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심의 시 활용하게 된다.

조성혜 위원장은 “근면위가 8년 만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한발 한발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실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와 산업노동 연구회 |

기후변화와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첫발’

7.27.(화) 「기후변화와 산업노동 연구회」 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월 27일(화)「기후변화와 산업·노동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기후변화에 따라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시동을 걸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국제사회가 이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목표와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국제 교역에도 규제로 작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우



리의 대응 정도와 관계없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는 그린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신규 일자리 증가 등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기존 탄소기반 산업의 쇠퇴와 고용감소 등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이에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전환에 영향을 받는 노사에 대한 '공정한 전환'의 길을 노사정이 함께 모색하는 과정과 실행이 필수적이라는 차원에서 연구회가 발족되었다.

연구회는 우선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태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내 기업의 대응 현황 및 해외의 산업전환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전문가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안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실태와 요구사항에 대해 점검한 이후에는 노사정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구체적인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연구회 좌장에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은 노동계 측에서는 한

국노총 총연맹, 공공노련, 금속노련이 참여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가 참여한다. 그리고 기후변화, 고용정책, 노사관계, 산업정책, 에너지정책, 직업훈련 분야에서 각 전문가가 참여한다.

노용진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산업전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협력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선 노사정이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 고령화 사회 대응 연구회 |

‘고령화 사회 대응 연구회’ 발족

고령사회대응연구회는 제26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20.11.23.)에서 ‘고령자 고용개선’(노동계 제안)과 ‘임금체계 개편’(경영계 제안) 관련 주제를 포함하여 논의하고, 연구회 운영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신설을 검토키로 하면서 연구회 발족 준비가 시작되었다.

위원회는 제10차(‘21.6.7.) 본위원회에 『고령사회대응연구회』 발족 계획을 보고하고 좌장 및 위원 구성, 세부 주제 등을 검토한 연후에 ’21.9.9. 고령사회대응연구회 발족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고령사회대응연구회 위원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노동계 3명(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실장,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경영계 3명(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정책팀장, 김선에 한국경총 임금·HR정책팀장,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정부 2명(주평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나운정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전문가 5명(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



구위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22.2.28.까지 운영키로 하였다.

고령사회대응연구회는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 및 특성, 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 현황 및 과제, 60세 정년 의무화 효과, 고령자 고용개선 및 고용지원 사례, 고령자 고용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초고령사회 대비 인프라 구축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고용임금시스템 마련을 위한 관련 쟁점 분석 및 노사정 의견 수렴을 목표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 1년 평가 토론회 |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 1년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 평가 토론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9.14.(화) 14:30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8월 함께 출범한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가 1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표에서 손영우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로 주제발표를 하고, 청년위원회 정보영 위원장, 여성위원회 김지희 위원장, 비정규직위원회 문현균 위원장이 각 위원회별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대외협력팀장, 구은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신수정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각각 발표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짚었다.

손영우 전문위원은 사회적 대화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단체의 대표성 문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계층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위원은 계층별위원회의 출범으로 그간 사회적 대화에 소외됐던 취약 계층들의 목소리를 공공정책 및 사회적 의제 논의 과정에 반영시켜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손 위원은 계층별위원회가 계층의 이해대변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계층을 포괄하는 폭넓은 위원구성이 필요하며, 전국수준의 노사단체 및 정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계층의 이슈가 전체 사회적 대화의 이슈로 공론화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위원회 정보영 위원장은 “1기 위원들은 다양한 의제를 탐색, 발굴하고 숙의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 ‘축적’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면서 “2기에서는 경사노위 내 다른 계층위, 의제별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청년 위원자리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협력에 대한 상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성위원회 김지희 위원장은 “노 사 정 공익으로 구성된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와 달리 계층위는 해당 계층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한 반면, 논의 결과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사노위 내부의 복잡한 의결구조를 간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계층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의제개발 조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위원회 문현군 위원장은 “1기 위원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 안에 계층 협의체로서 위상 정립과 역할 확대 모색하고, 취약노동자의 효과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다”고 평가하면서 “2기에서는 1기에서 마련된 내용을 발전시켜 의견 개진 방식의 개발과 제도화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 분과위원회 |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정지출 합리화 등 총론에는 동의
거버넌스 개편 등 구체적 세부 추진 방안에는 이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하 분과위)는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를 9.29.(수)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6월부터 운영되어온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분과위원회」의 논의경과와 노사정 간 주요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건강보험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정 논의경과 및 쟁점’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정책방향: 경사노위 논의주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로 이뤄졌다.

첫 발제자인 김진현 교수는 분과위에서 논의되었던 건강보험의 보장성, 재정지출관리, 재원조



달, 거버넌스 개편, 연계·협력 등 총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사정의 주요의견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보장성 부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 추진 및 국민 의료비 수준과 보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동의했지만,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 및 관리방안 마련 등 합의문 도출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등에는 이견이 있었다.

둘째, 재정지출관리 부분에서는 재정지출 합리화 추진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였으나, ▲약제비와 치료재료비의 목록 재평가,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경쟁 입찰 도입, ▲총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합의 문안 도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

셋째, 자원조달 부분에서는 공정성 제고를 위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강화와 지역·직장가입자간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건강증진부담금 상향 등 자원조달 다양화 방안, ▲보험료율 법정상한선(現 8%) 검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넷째, 거버넌스 개편 부분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심사평가원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이행상충 관계자 배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으며, 다섯째, 연계·협력 부분에서는 공사의료보험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등에는 동의하였으나, ▲공공의료 확대,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고

▲ 총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

진료비 지불제도는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 방식으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별수가제, 질환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 진료비 총액을 추계하고 협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 총액을 지급하는 총액계약제 등이 있음

▲ 건강증진부담금 상향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일명 담배부담금이라고도 불림.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의 지원 상한은 65%임

▲ 거버넌스 개편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거버넌스에는 보험료율과 보장범위(급여범위)를 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수가계약 및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통해 이용량을 관리하고 질병 관리를 추진하는 심사평가원 등이 있음

다음으로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역 완결형 통합 연계의료 체계 등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간호간병 서비스 부담완화, 안전망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부담 없는 병원의 단계적 확충, 건강보험플러스(공적보험 보장범위 확대) 도입을 통한 보험료 부담 감소 및 혜택을 제안했고,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고지원규모의 명확화,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분과위 논의에 참여했던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했다. 분과위 논의에 참여했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손석호 한국경총 사회정책팀장, 진영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발제 내용에 대해 보완하거나 추가 의견을 제안했으며,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문가 입장에서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건강보험 주요정책과제

과제	주요 내용
보장성	보장성 확대 노력 지속 추진
	보장성 측정, 관리 체계 마련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와 실태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재정지출 관리	재정지출 합리화
	약제비와 치료재료비의 목록 재평가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경쟁입찰 도입
	총진료비 관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 검토
	상대가치제도의 재정중립원칙 유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계약제 전환
재원조달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강화
	재원조달의 다양화
	건강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개정 검토
거버넌스	국민중심의 거버넌스 개편, 특히 실명제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추진
	건정심의 공익위원 선임방법 개선
	심평원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이해상충 관계 배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 회복
	건강보험료를 재정운영위원회 혹은 건정심에서 심의, 복지부 최종결정
연계와 협력	공공-민간보험, 직장·공중보건·건강서비스 등 의료정보 연계 활용
	사보험 상품에서 공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급여 제외
	공공의료영역의 정책가산 적용 및 적정인력 확보 위한 보상기제 마련
	공공병원 및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 비급여없는 공공병원 시범운영
	1차 의료기관 활성화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주치의제 도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택의료와 비대면 진료 체계를 구축

| 국제 협력 활동 |

문성현 위원장

'러시아 제6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2~4일에 개최된 제6회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2021)에 참석했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동방경제포럼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극동 지역을 위한 새로운 세계'라는 대주제 속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문화, 스포츠 행사들이 진행됐다.

이번 동방경제포럼 참가자는 58개국 4,000여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극동지역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행사이다. △지역 및 글로벌 경제 현안, △경험 공유, △지역 간 협력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몽골 우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이 참석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인도 모디 총리, 태국 썬라웃 총리는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본회의 발표에서 최근 6년간 극동러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2배 증가하고, 산업생산이 20%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2,500개 기업이 입주해 6만 8,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항공, 조선, 화학, 가스, 물류 분야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진행된 친환경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동방경제 포럼]

-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투자 유치와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국제회의로 푸틴 대통령의 극동 개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주최: Roscongress 재단)



한편, 문성현 위원장은 본 포럼의 주최기관인 Roscongress 재단으로부터 연사초청을 받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포스트 팬데믹 아젠다를 위한 협력과 공동 활동' 세션에 온라인으로 참석,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응과 대전환시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의 도전'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문성현 위원장은 발제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정부의 방역관리, 코로나 관련 추경을 통한 경제충격 완화 정책, 코로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지원 정책'등에 대해 공유하고, 노사정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7.28 협약을 소개하면서 위기 속에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오늘날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양극화, 고령화 등의 도전과제에 직면하였으며 이와 같은 새로운 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포용'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사노위에서는 앞으로 혁신과 포용을 양대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의제와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의 도출 및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